

# 지방 상수도 민간위탁(민영화) 계획 분석

작성 공무원노조 정책실(02-2631-1948)

## 1 지방 상수도 민간위탁 현황

### 가.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 현황

▶ 232개 기초 자치단체 중 18개 자치단체 민간위탁(7.7%)

▶ 민간위탁 현황

○ 개별위탁 : 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 고령, 천안(공업), 금산, 동두천, 거제, 양주, 나주, 단양(13개 시.군)

○ 통합위탁 : 파주, 함평, 광주, 통영, 고성(5개 시.군)

### 나. 충청남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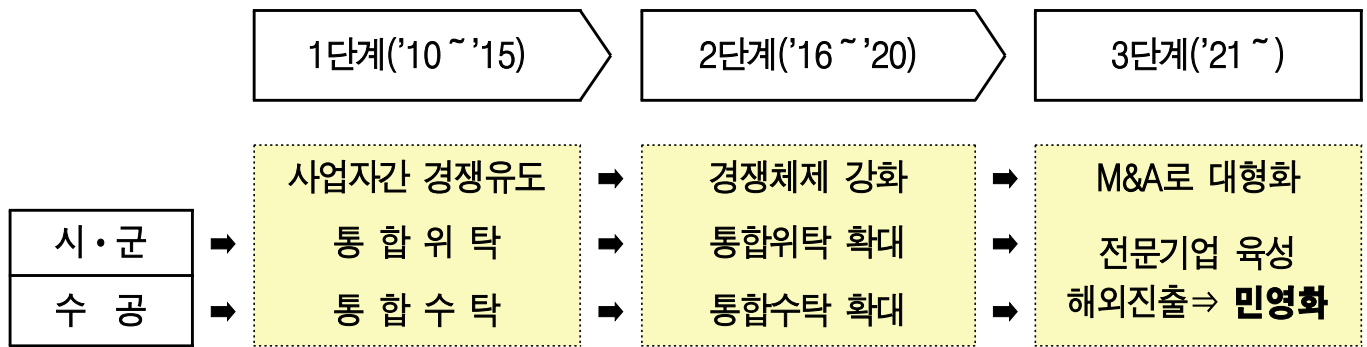
통합운영 의향서 제출 시. 군		사업진단 및 검토 중	미 추진	비 고
기 민간위탁	신규위탁			
서산, 논산, 금산 ⇒ 3개 시.군	청양, 홍성, 예산, 공주, 부여, 연기 ⇒ 6개 시.군	보령, 당진, 태안 ⇒ 3개 시.군	천안, 아산, 계룡, 서천 ⇒ 4개 시.군	천안시 공업용은 기 위탁 완료

⇒ 충남의 경우 2010년부터 충남서북부권, 남부권 등 권역별 통합 위탁 추진 중

## 2 『물 산업 육성 전략』의 진실

### 가. 정부의 『물 산업 육성 전략』 추진계획

#### ▶ 추진일정



#### ▶ 『물 산업 육성 전략』의 진실

- 정부는 ‘물’을 인권이나 생명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재로써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물 산업 육성’은 물의 사유화, 상수도 민영화의 또 다른 표현임.

“우선, 적정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공공부문 내 기존사업자인 대규모 수도사업자 (특·광역시)와 공기업(수공, 환경공단)에 위탁시켜 수도사업 전문기관으로 육성하여 경영 효율 제고, 규모의 경제 달성 및 물 기업들의 전문 경영능력 확보 ”

※ 출처 : 환경부, 국토부, 녹색성장추진위 『물 산업 육성 전략』 p12

“최종적으로 상수도와 하수도를 유역별로 통합하여 운영 ⇒ 토탈솔루션 역량을 확보한 세계적 물 기업 육성”

※ 출처 : 환경부, 국토부, 녹색성장추진위 『물 산업 육성 전략』 p13

“민간기업의 수도사업 위탁은 공기업(환경공단, 수공)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교두보 확보 후 점진적 추진 ⇒ 민영화 논란으로 직접적인 민간기업 참여는 곤란, 상수관망 관리 등 단순위탁 및 공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운영경험 확보”

※ 출처 : 환경부, 국토부, 녹색성장추진위 『물 산업 육성 전략』 p13

“단기적으로 운영관리 실적을 보유한 공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 진출하되 ⇒ 운영관리는 장기적으로 민간에 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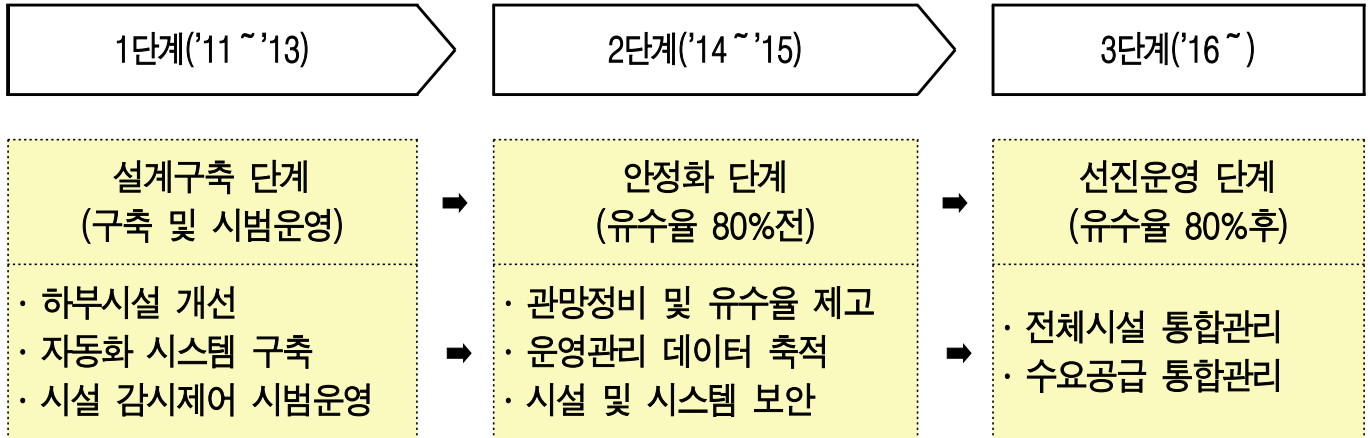
※ 출처 : 환경부, 국토부, 녹색성장추진위 『물 산업 육성 전략』 p18

- 정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방 상수도의 통합운영을 세계적인 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뻔뻔스럽게도 민영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민간기업의 직접적인 참여가 아닌 컨소시엄 방식 등을 통해 운영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도 자료에 명시하는 등 대 국민 사기극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운영관리는 장기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 수공에 통합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 00군의 『地方 上水道 統合委託 運營』 계획을 살펴봐도 『해외 다국적 물 기업 국내진출에 대비 수도 산업 경쟁력 확보 ⇨ 국내 기업의 육성과 해외 물 시장 진출(국부 창출)』 이라고 통합위탁의 목적과 정부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이는 ‘수공에 민간 위탁하는 것이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논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국민 사기극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세계적인 ‘물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기업가적 발상이지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이어서는 안 되는 것임.

### 3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 가. 정부의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추진계획

### ▶ 추진일정



### ▶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의 진실

- '물 산업 육성 전략'과는 달리 민영화에 대한 표현을 사용치 않고 있음.
- 하지만 단계별 추진일정을 보면 '물 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정부의 재정지원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2010년까지 통합위탁 운영하는 지자체에 한하여 유수율 제고사업비의 40%를 지원(2012부터 국비 70%지원 추진)하고 위탁운영 거부 시군에 대하여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국비지원 대폭축소 방침.’

※ 출처 : 00시. 군 통합위탁 계획

- 이는 정부의 '물 산업 육성 전략'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노골적인 표현이며 지자체의 의도와는 별개로 정부의 계획에 따라 민간위탁은 민영화로 갈수밖에 없는 조건임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임.

## 4 민간위탁(민영화) 사례와 문제점

### 가. 지방 상수도 민간위탁 사례

▶ 논산시 위탁 전. 후 예산 비교

구분	항목별 합 계	예 산 현 황 (천원)						수도요금 (톤/원)
		운 영 비				사업비	영업외 비용	
		계	인 건 비	일 반	위 탁 비			
위 탁 전 (2003년)	6,765,953	5,288,065	1,211,938	4,076,127		1,060,000	417,888	709
위탁 첫해 (2004년)	7,008,783	5,972,288	640,377	1,997,397	3,334,514	325,000	711,495	807
위 탁 후 (2010년)	12,021,858	10,189,942	675,972	123,444	9,390,526	516,000	1,315,916	883.45

- 전체예산 : 2003년도에 67억 6,595만 3천원이었던 예산이  
2010년에는 120억 2,185만 8천원으로써 178%로 증가
- 위 탁 비 : 첫해인 2004년도에 33억 3,451만 4천원이었던 예산이  
2010년에는 93억 9,052만 6천원으로써 281%로 증가
- 수도요금 : 2003년도에 톤당 709원이었던 요금이  
2010년에는 883.45원으로써 125%로 증가

▶ 논산시 사례에서 본 문제점

- 이와 같이 수도요금을 올렸음에도 위탁비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2010년 예산서상 영업 손실이 36억 9,245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또한 실시협약서 상에 있는 물가인상을 반영에 대해 논산시 측은 기준 시점에서 5% 인상 시 총 계약 기간 중 단 한 번만 올리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수공 측은 누적 5% 인상 시 마다 한 번, 즉 인상 후 다시 누적 5%가 오를 때 인상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다툼이 계속되고 있음.
- 운영대가에 적용할 인율(사업의 실질 수익률)을 3% 반영하여 수공의 이윤을 보장 하였음에도 소비자물가 5% 상승시 추가로 운영대가를 5% 인상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예산으로 수공의 이익을 이중으로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음.

- 만약 수공 측의 주장대로 결정될 경우 논산시는 수공에 연평균 60억 원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어 현재보다 수도요금을 4~5배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됨 (MBC 2580에서 방영됨 - 2008. 6월 방송)

⇒현재 톤당 883.45원 인데 3~4천원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함.

전국 평균 사용량 1인 1일 176ℓ를 적용하여 4인가족 1개월 수도요금을 계산해 보면 18,700원 정도인 수도요금이 63,400~84,500원 정도로 인상됨

- 실시협약서에 명시된 운영대가는 위탁년도를 기준으로 한 불변가격이므로 실질운영대가보다 훨씬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에도 상수도 민영화에 혈안이 된 수공과 지자체 관계자는 숫자놀음을 통해 지방의원, 지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임
- 추진계획에 따르면 신규시설투자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되어있는데, 논산시의 경우 2003년 송배수관 연장이 200km에서 2009년 330km로 6년 동안 130km를 신규로 매설하였다. 지자체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신규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수공이 가져가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됨은 물론 신규관로 매설에 따라 자동적으로 유수율이 올라가게 되어 수탁기관인 수공은 아무런 투자도 없이 추가이익을 가져가게 된다.
- 자체운영시 보다 개별위탁 시 생산원가가 절감된다고 하는 것은 자체 취. 정수장 폐쇄에 따른 손실비용, 추가되는 원. 정수 구입비용, 물가 상승률 적용. 투자보수율 등 실질운영대가 인상비용이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돗물을 생산하는 원가, 즉 수공이 수돗물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기초비용은 줄어든다. 하지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수돗물 생산원가에 앞에서 예시한 부대비용을 추가해야하기 때문에 총괄원가는 더 늘어난다. 간단히 말해 수자원공사는 민간위탁을 확대할수록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으나 개별 지자체는 수공의 이윤까지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논산시의 경우 위탁 전 자체 취. 정수장이 있었으나 수공으로 위탁 후 취. 정수장을 폐쇄하고 원. 정수를 수공에서 구입함으로써 추가비용이 발생했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정수장을 불과 2~3년만에 폐쇄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함.

▶ 그 밖의 사례에서 본 문제점

- 민간위탁을 추진하다 중단한 부여군의 경우, 『부여군 상수도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수공은 지자체와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이 3%를 넘을 때마다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을 실시한 논산시와 다르게 이후에 민간위탁 실시협약을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는 물가인상률 3% 이상시마다 운영대가에 반영토록 함
- 연평균 3.2%인 물가인상률을 감안할 때 타 자치단체는 2년에 한번이 아닌 매년 운영대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2년에 한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논산시보다 매년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타 자치단체의 실질운영대가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논산시는 실시협약서 상 ‘최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므로 물가인상률 5% 이상시 한번만 운영대가를 인상한다고 주장하며 다툼을 계속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는 그런 주장을 펼칠 근거조차 없어 물가인상률 3%이상시마다 운영대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으므로 매년 추가로 수십억원을 수공에 지불해야 한다.
- 2004년 논산에 이어 두 번째로 수공에 상수도 관리를 맡기며 자체 정수장을 폐쇄한 정읍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상수도 민간위탁 시행 5년째를 맞는 2009년부터, 정읍은 수공과 ‘물값 분쟁’에 휘말렸다. 정읍시 상수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애초 수공과 운영 단가를 협의할 때 투자보수라는 이름으로 수공의 이윤을 3%로 잡아놨는데, 올해부터 물값에 또다시 3%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논산시와 같은 사례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더 큰 문제는 2007년 이전에 수공과 민간위탁 계약을 맺은 논산·정읍·고령 등은 운영관리비와 시설투자비의 3%를 투자보수(적용할인율)로 주기로 했다. 반면 2007년 이후 계약한 충북 단양·경남 거제·경기 양주 등은 5% 안팎이며, 『충남서부권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을 보면 투자보수율을 6%로 적용하고 있어 논산시보다도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상수도 위탁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 영주시의회는 2011년 8월 상수도 수공 위탁에 대해 ‘요금 인상 요인 많고 독소조항 많아’ 최종적으로 “부결” 처리함

- 2008년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경기도 양주시에서 2011년 1월 작성한 『양주시 상수도 위탁운영 부실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손실액이 연간 109억6천700만 원으로써(총괄운영비 187억9천500만원에서 직영으로 운용될 경우의 직영운영비 78억2천800만원의 차액), 수자원공사와 20년간 진행될 위탁운영비를 실시협약 내용대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산출하면 2천193억3천만원이 수공에 위탁비로 지불하게 된다고 한다.
- 2010년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경남 통영시 보고서를 보면 통영의 수도요금이 전국에서 3위, 경남에서 1위로 가장 비싼 수도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해외 상수도 민영화 사례

### ▶ 사례 하나(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의 수도가 초국적 물기업인 온데오와 RWE-템즈에 위탁 되면서 요금은 2001년에 35%, 2003년에 40%, 2004년에 30% 인상되었다. 그러나 그 기업들이 손실을 주장하자 자카르타 주지사는 2005년부터 6개월마다 자동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즉, 향후 남아있는 계약기간인 18년 동안 요금이 손익에 관계없이 36번이나 인상되게 된 것이다.

### ▶ 사례 둘(남아프리카공화국)

1994년 이후 남아공 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고 물 사유화를 시작했다. 그 결과 초국적 물 기업 수에즈가 들어와서 사유화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요금이 600%나 인상됐다. 또한 '요하네스버그 물(JW)'은 물 사용요금을 제대로 낼 여력이 없는 빈민가 지역에서 이익을 회수할 방법으로 물을 사용하기 전에 소비자가 카드를 구매하고, 그 구매액에 해당하는 양을 계량기에 기록해서 공급하는 방식의 '물 선불제' 시스템을 시행하여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물에 대한 접근자체를 차단시켜 버렸다.

### ▶ 사례 셋(우루과이, 필리핀)



우루과이는 물 사유화가 2000년 말도나도에서 시작되었는데 프랑스 초국적기업 온데오와 스페인의 아루아스 빌바오가 들어왔다. 그 결과 수도요금이 10배 이상 상승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두 개의 사기업인 마이닐라드 워터와 마닐라 워터가 1997년부터 수도 공급을 맡았는데, 2001년 이후 마이닐라드는 수도요금을 500% 올렸다. 현재 일반 가정에는 하루 4시간만 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마닐라 워터는 수도요금 700% 인상을 강요했다

#### ▶ 사례 넷(영국)

1997년 영국 정부의 수도감시단이 온데오의 자회사인 노섬브리안 워터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최악의 사업운동을 보여주었다고 발표했는데, 주요 원인이 수질악화였다. 노섬브리안 워터가 공급한 물에서 철과 망간이 다량 검출된 것이다.

영국에서는 앵글리안 워터, 노섬브리안 워터, 서번트렌트 워터, 웨식스 워터, 요크셔 워터 등의 기업들이 1989년에서 1997년 사이에 수도물 누수에서부터 폐수 불법방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혐의로 128차례나 기소되었다.

#### ▶ 사례 다섯(이탈리아)

정부에서 상수도 민영화 우수사례로 꼽은 이탈리아의 아프릴리아 시를 MBC 2580에서 취재한 내용을 보면 민영화 후 수도요금이 월 20만원으로 폭등하여 주민들이 수도요금 납부를 거부하고 계량기를 쇠사슬로 봉인하여 사용량 측정과 단수조치를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 ▶ 사례 여섯(프랑스)

1985년 베올리아와 수에즈로 민영화되었던 프랑스 파리의 상수도를 그간 민영화로 인해 지적되었던 많은 문제점들, 특히 업체들마다 운영체계와 요금체계가 제각각이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했던 점과 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 상수도 보급을 2011년부터 다시 국가 관리체제로 전환

○ 세계적 물 기업에게 상수도를 위탁하면서 발생한 사례들이다.

- 공공재이며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물을 자본과 기업의 논리에 맡긴다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당연히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임.

##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정책의 문제점

- ▶ 정부의 계획대로 세계적 물 기업이 육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물 기업 하나를 키우는 것일 뿐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물 산업에 뛰어들다는 것은 세계적 물 기업인 베올리아, 수에즈 등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수도는 물 기업들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
- ▶ 상수도는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상 지역 내 경쟁이 아닌 지역독점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상수도 관로망이 다른 대전시 상수도와 충남 논산의 상수도가 서비스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전기나 상수도처럼 전선 또는 관로에 따라 지역독점 체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 서비스나 가격인하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인상을 통한 고수익창출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 ▶ 따라서 정부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물 전문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을 통하여 영업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밖에 없으며, 물은 다른 소비재와 달리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게 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후에 초국적 물 기업은 철수할 수도 있다. 이는 이미 남미 등에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많은 초국적 기업이 철수한 사례에서 보듯이 기우가 아닌 현실인 것이다.
- ▶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적인 물 전문기업 육성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도국 시장에서 이윤을 얻기 위해 세계적인 물 기업을 육성하자고 한다. 그런데 세계적인 물 기업을 육성한다고 상하수도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세계적인 물기업이

있는 프랑스의 경우 물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 요금도 높고 유수율도 74%대로 한국보다 낮다. 또한 세계적 물기업을 육성한다고 정부가 말하는 대로 많은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다. 최근 초국적 물기업들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에서 철수하였다. 충분한 수익을 못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익을 내자면 물 값을 대폭 올려야 하는데 이는 해당 국가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 또한 요금 현실화율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지방상수도는 저렴한 요금으로 인한 적자를 지자체 예산에서 보전해주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공의 자산인 물만은 잘살던 못살던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자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지방 상수도가 민간위탁을 거쳐 세계적 물 기업에게 넘어갈 경우 생산원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더군다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자본의 속성을 감안해보면 10배, 20배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 결코 공허한 주장만은 아니다.
- ▶ 또한 위탁기간이 2-30년으로 장기계약이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의 특성상 민간위탁에 따른 폐해는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사유화)이 안착화 되는 시점인 5-10년 후나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이때는 상수도 관련 인적, 물적 재원의 고갈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며, 다시 상수도를 공영화 한다고 해도 물 사유화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폐해를 경험한 후에 되돌리는 것은 사유화가 진행되기 전에 막아내는 것보다 수십 배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 ▶ 이는 우리 세대들의 잘못을 다음세대, 즉 우리의 자식들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2-30년 후에 정책의 실패가 확연하게 드러나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는 그 당시의 국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으며, 민간위탁(민영화)을 추진한 단체장이나 정책 담당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 지방정부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압박을 핑계로 민간위탁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충남 시. 군들의 최근 몇 년간 예산서를 살펴보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배정이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만 탓하거나 선거를 위한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편중하여 편성할 것

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하여 자체 예산을 노후관로 교체 등을 위해 편성하여야 한다.

※ 유수율이란? 정수장에서 보내진 물이 가정에 도달한 비율

정수장에서 100톤을 내보냈는데 가정에서 계량된 양이 50톤이라면 유수율은 50%

## ▶ 수자원공사 현실

○ 4대강 사업에 8조원 투자 ⇒ 부채급증 및 재무건전성 악화

○ 수도요금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 인상계획 ⇒ 4대강 사업 참여로 인한 재정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담전가

○ 부채현황

2007년 1조 5,756억원에서 2011년 6월 현재 10조 8,862억원으로

⇒ 9조 3,106억원 증가

○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현황

광역상수도 영업이익 2012년 721억원에서 2019년 3,225억원으로

⇒ 2,504억원 증가예상

지방 상수도 2012년 101억원에서 2019년 1,698억원으로

⇒ 1,597억원 증가예상

○ 수공은 2004년부터 7년간 전국 45.5km 구간에 강관에 비해 20%가량 저렴한 GRP(유리섬유관)상수도관을 설치하여 왔으나 최근 발암 등 유해성 논란과 내구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지자체의 교체요구가 늘어나자 사업을 중단하고 기 설치된 지역도 강관으로 교체를 검토 중임.

○ 수자원공사의 물 값은 적정한가?

인천시 자체정수장 풍납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의 톤당 가격 ⇒ 47.93원

수자원공사 팔당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의 톤당 가격 ⇒ 213원

○ 이는 수자원공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이나 사업의 안정성 등은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상. 하수도 위수탁 또한 영업이익을 확대하여 악화된 재무건정성을 개선코자 하는 의도라고 판단된다.

## 6 상수도 민간위탁(민영화)와 맞선 공공적 대안

- ▶ 인권으로서의 물 기본권을 정립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은 인권이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 차별받지 않고 물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나아가 인권으로서의 물, 물 자원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인간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국가와 사회는 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국민 모두에게 공급해야 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
- ▶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원수 가격 책정에 대한 재검토 및 원가공개가 필요하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인천시 자체정수장인 풍납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의 톤당 가격은 47.93원인데 비해 수자원공사 팔당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은 톤당 213원으로 4배이상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 . 이는 4대강 사업 및 댐 등 광역상수도 시설의 과잉투자과 물 값 결정과정의 불투명성에 있다고 판단된다.
- ▶ 상수도의 전국적 단일화와 요금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상수도 사업은 전국적 단일화를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정과 관리·운영 체계를 우선 단일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 상수도 차원에서 행정 구역별이 아닌 수계를 고려한 운영과 관리의 통합, 지방상수도와 광역 상수도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 ▶ 이를 바탕으로 요금 체계도 단일화해야 한다. 서울 강남이 강원 태백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 강남과 강원 태백이 같은 요금을 내고 물을 공급받을수 있도록 공공성을 전제로 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관리, 운영과 재원 조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 통합 위수탁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유수율 제고사업비를 지원하고 참여치 않는 지자체에 상하수도 관련 보조금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하여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 ▶ 공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 문제를 들어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앙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재정 통합으로 공적인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운영대가는 지급해야 하고, 미 급수 지역에 대한 신규 보급, 장기 투자 등의 비용 역시 동일하게 들어간

다. ‘물 산업 육성전략’에서 말하는 수조 원의 재정투자를 공. 사기업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대단히 열악한 지방상수도 재정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 ▶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지역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은 서로 적이 아니다. 지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는 것은 지역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들의 의무인 것이다. 중앙정부와 예산을 핑계로 지역민들에게서 물에 대한 권리와 생명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 전국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한 자치단체는 232개단체중 18개 밖에 안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역민들과 함께 잘못된 정부 정책을 고쳐내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전국 시장. 군수회의 등을 통해 생명이요 인권인 물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 ▶ 주민과 관련 노동자들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상수도 산업의 올바른 발전 방향이 설정되고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 분야에서 공적·사회적 소유구조는 공공성 확보의 가장 큰 전제다. 공적 소유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차원의 규제기구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상업주의적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방상수도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관련 노동자와 지역민 그리고 지자체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